“농정부처 개혁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축산업, 규제 위주론 지속 불가능 현장에 맞는 정책 현실화

범축산업계가 농정부처 개혁과 축산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는 최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범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공약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축산단체와 축협, 축산분야 연구단체들이 힘을 모아 축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15가지 숙원과제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각 대선캠프에 호소한 것이다. 축산업계의 염원을 담은 15가지 대선공약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축산 부문 대선공약 건의안

Ⅰ. 축산농정 정상화

- 농민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Ⅱ.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Ⅲ.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보전대책 마련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 축산업 소득세 '국세' → '지방세' 전환

Ⅳ.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原乳) 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 동물 진료체계 마련
-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Ⅰ. 축산농정 정상화

범 축산업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에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 관련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농민소통실 신설 및 규제중심 방역정책 개혁을 통한 현장 농민 의견이 반영되는 축산농정을 구현하는 발판 마련을 첫 번째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1 농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 일하는 농식품부 및 농정수장 선임방식 개혁, 농민소통실 신설
- 규제중심 방역정책 개혁(국가책임 강화), 축산물 안전·위생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 축산 전문직 인력 확충
- 축산진흥청 설립

Ⅱ.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

미래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 공급산업의 필수 공익적 사업 지정 등을 요구했다.

2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 축산부문 예산 증액, 축산가치 헌법 반영 및 축산발전기본법(가칭) 제정

3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

- 대형선박 통한 사료원료 입항 항구 준설, 도축시설 운영자금 지원
- 유통 정책지원 강화, 축산 전후방산업 전 부문 전기요금 감면

Ⅲ.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축산 관련 정책 수립 시 축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농장 운 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 가치로 설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4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 공익직불제 축산농가 포함 및 축산농가 기본 소득법 제정
- 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축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조성, 제도개선
- 군급식 공급방식을 계획생산체계에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 유지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외 개선

5 '관세 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 축산물 자급률 상향 조정 및 FTA 피해 직불금 제도 개선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축발기금 재원 확충

6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제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입 조사료쿼터 및 국내산조사료 기반사업 확대
- 해외곡물자원 개발 지원, 거점 조사료 물류·저장 창고 운영

7 축산물(가금육)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 간소화

8 축산업 소득세 '국세' → '지방세' 전환

Ⅳ.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범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사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 질병 방역과 관련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와 축산안전과 관련한 농장 동물 진료체계마련 등을 요구하는 한편,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악취제거, 질병예방 등 기존 축산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고, 아울러 생산성 향상 위주의 축사·장비 보급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등 스마트축산 확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주장했다.

9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축산관련 ICT 전문업체 및 인재 육성,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 마련

10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原乳) 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 물류파업 시 가축사료 및 원유는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 방안 마련

11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사업 지원
-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한 제도개선(장기고정가격제 등)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메탄·저단백사료 사용농가 및 사료산업 지원

12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 화학비료 감축중심의 통합 양분관리체계 구축
- 가축분뇨 관리법령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존치

13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정부 살처분 정책 완화 및 피해농가 보상 기준 현실화
- AI 근본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지원 강화
- ASF 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 증액 (인건비 현실화 등)

14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 동물 진료체계 마련

- 산업동물 수의인력 지원
-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확대

15 후계 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 및 주거단지 지원